

한국 국가 개념의 전통 연구

— 동서양 국가 개념사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박상섭 |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 **논문분야** 한국사, 정치사상

■ **주 제 어** 국가, 개념사, 근대 국가, 민족, 주권, 유길준, 신채호

■ **요 약 문**

이 글의 목적은 한국사에서 국가 개념의 역사를 추적하는 것이다. 국가의 현상은 일정한 역사 시기 이후에서는 보편적인 것이지만, 지역과 시간에 따라 영토의 크기와 지배 권력의 침투도에서 상당히 다른 형태를 보여 왔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가라는 하나의 보편적 개념이 사용되어 왔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국가 개념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국가는 표면적으로는 서양식 근대 국가이지만, 그 기저층에는 전통적 요인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한국사에서 국가 개념의 전통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현재 한국 국가가 취하고 있는 서양식 근대 국가 개념의 변화 과정을 살피고, 중국과 일본에서의 국가 개념의 내용을 검토한 다음 그것들과의 연결 속에서 한국에서의 국가 개념의 전통을 검토했다. 한국사 전통에서의 국가 개념은 상당한 안정성을 누려 왔는데, 이것은 국가의 기본틀이 크게 동요되지 않았던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안정이 깨진 것은 19세기 서양 및 일본에 의한 개항 요구 이후의 일이었다. 이에 따라 국가에 대한 성찰이 분출되지만, 준비된 이론적 자원이 없던 상황에서 외국에서 유입된 이론을 바탕으로 자신의 문제를 설명했다. 주로 다룬 문제는 국권 상실의 위기에서 민족주의적 관점에서의 국가의 중요성을 각성시키려는 계몽적인 내용의 것들이었다. 이러한 논의는 그나마도 국권 상실과 함께 중단되었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 문제에 관한 독자적인 성찰의 기회가 일단 사라지고 난 이후 이러한 독자적 성찰의 기회는 쉽게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1. 개념사 연구의 의의

역사적 현상을 지칭하는 모든 개념들은 그 자체로서 자명하거나 시공을 초월하는 보편적 성질의 것으로 보고, 따라서 다른 역사연구를 위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취급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회관계를 지칭하는 모든 개념들은 그것들이 만들어지거나 또는 사용되는 특정 시기와 장소에 의해 그 독특한 내용이 규정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개념들이 시간과 장소에 의해 그 내용이 특수하게 규정되면서도 시간과 장소의 특수성을 넘어서 그 개념들은 일정한 보편성을 갖는다. 이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묶어서 같은 개념을 사용하여 부르기도 하는데, 이러한 최소한의 보편성을 기초로 하여 시간과 장소를 넘어서는 비교 연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예컨대 이 글에서 중심 주제로 다루어지게 될 국가의 경우, 시간과 장소에 따라 대단히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계속 변화하지만 우리는 그 다양한 것들을 모두 ‘국가’라는 이름으로 부르면서도(고전 그리스의 폴리스나 고대 중국의 제국도 모두 국가라고 부른다) 큰 불편 없이 의사를 소통할 수 있는 것은 그 다양한 현상들에서 공통적 또는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특정한 양상이, 국가의 경우, 일정한 지리적 범위를 매개로 하는 지속적인 명령과 복종의 인간관계가 공통분모로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동일한 개념이 사용되면서도 그 개념을 통해 지적되는 구체적인 정치적 또는 사회적 현실이 시간과 장소에 따라 상당히 편차를 보이는 것은 그 개념으로서 지칭되는 현실이 전혀 다른 정치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국가라는 현실의 경험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엄청나게 큰 편차를 보여 왔고 또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국가라는 개념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회 또는 사람에 따라 엄청나게 다른 내용을 지칭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어떤 특정 개념의 다의성 또는 애매성의 요인으로 해석되고, 따라서 엄밀한 논리

적 일관성을 가져야 할 정치 이론 또는 사회 이론을 위한 개념으로서의 부적격성의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했다.¹⁾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개념 내용의 편차를 추적함으로써 다른 방법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다양한 현실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다양성이 나타나게 한 요인을 추적하는 작업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 말을 바꾸어 왜 그러한 편차가 생기게 되었는가는 문제를 추적할 경우, 국가의 개념 자체가 정치적 현실을 분석하는 직접적인 도구는 아니지만 다양한 정치사회적 현실을 지적하고 그 원인을 찾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²⁾ 따라서 국가의 개념은 결코 배격되어야 할 애매한 개념이 아니라 지역과 시간에 따라 나타나는 풍요한 다양성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데 결정적 도움을 주는 도구 또는 수단으로서 그 생명력을 새롭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서유럽사와 관련된 국가 개념의 역사적 변화에 대한 추적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국가라는 특정 개념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서유럽에서 ‘국가 부재’의 봉건사회로부터 중앙집권적 영토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근대 세계로의 질적 변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작업으로 이해된다. 왜냐하면 서유럽 사회에서 이루어진 근대화 과정은 물론 국가의 변화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국가의 구조적 변동과 그 국가들을 주체로 하는 근대 국제질서의 확립을 중심축으로 하면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근대 국가 체제의 확립은, 자본주의 경제 질서는 물론이고 도덕과 법의 관념, 인간관, 미의 관념, 그리고 이것들과 직간접으로 연관된 많은 다양한 측면에서의 구조적 변화를 수반하는 중심적 변동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 예컨대 국가 개념이 갖는 애매성 때문에 1950년대 미국 정치학에서 국가 개념 대신에 정치체제의 개념의 사용이 제안되었고 많은 호응을 얻었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작업으로는 Easton, David(1953), *The Political System*, New York: Knopf를 들 수 있을 것이다.
2) 국가 개념의 이러한 효용성에 대해서는 Dyson, Kenneth(1980), *The State Tradition in Western Europ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 7~15참조.

근대 국가 체제(the modern-state system)는 16세기 유럽에서 출현한 배타적 영토 관념을 기반으로 하면서 만들어진 독특한 정치권력조직의 방식인데, 그 체제는 단순히 국가의 내부 체제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조직으로서의 내부 체제와 관련하여 주변국들과 긴장된 경쟁관계를 수반함으로써 출현하게 된 독특한 국제관계 체제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근대 국가 체제라고 불리는 이러한 독특한 권력조직의 방식은, 서양의 경우 16세기 이후 모든 측면에서의 삶의 구체적 모습을 규정지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의 변화에 따라 당연히 국가에 관한 사회적 관념은 큰 변화를 겪고 새롭게 규정되었다. 개념사 연구 작업에서 국가에 관한 논의는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따라서 우리는 국가의 관념의 변화와 동시에 그러한 변화에 따라 다른 이름들이 부쳐진 역사를 추적하면서 서유럽 사회 전체의 구조적 변동 및 확산 과정의 중심적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대내외적 정치 문제는 1차적으로는 세계적 수준에서 조직되고 있는 권력구조의 틀, 즉 근대 국가 체제의 틀을 기초로 규정된다. 이 때문에 우리의 의지 여부와 무관하게 우리의 국가 관념의 상당 부분이 서양적 개념에 의해 지배되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며, 따라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국가 개념 형성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도 서양적 국가 개념의 역사적 뿌리를 알아야만 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우리의 국가 개념은 적지 않은 부분에서 전통적 개념의 영향하에 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국가의 용어가 서양어의 the state의 번역어인 경우가 많지만, 이 국가라는 말 자체는 서양어의 the state가 소개되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가 사용하던 말이다. 따라서 한국사 전통에서의 국가 개념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서양 이론의 틀 속에서 국가의 문제를 논의하지만, 어느 정도 서양적 국가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또한 서양적 개념이라고 해

도 근대적 개념과 전통적 개념에는 편차가 존재하는데, 어떤 쪽에 더 기울어져 있는지도 불확실하다. 아니면 논의의 틀만 서양 이론을 사용하면서 실제로는 한국사 또는 동아시아의 전통적 국가의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도 불확실하다.

왜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개항 이후, 그리고 보다 더 직접적으로는 광복 이후 축약된 근대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새로운 제도와 전통적 사고 관습의 다른 변화 속도 때문에 여러 가지 착종과 혼돈을 겪어 왔고, 아직도 그 혼돈 상태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상태를 빨리 극복하고 안정된 삶의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문제의 성격과 우리가 서 있는 역사적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큰 의문 없이 채택하고 있는 정치/사회 제도와 일상적 사고/행동의 기저에 깔려 있는 사회와 정치를 보는 기본 관념 사이의 정합 관계를 알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서양에서 도입해 채택하고 있는 각종 제도들, 예컨대 시장경제, 정당민주주의, 그리고 이와 관련되는 다른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제도들은 서양에서 비롯한 것들로서 서양에서 발전된 개인주의, 계약사상, 시민권 의식, 정치권력의 견제 필요성 등 다양한 기초적 정치/사회사상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초적 태도 면에서는 가족중심주의, 가부장주의, 온정주의 등의 전통적 유교식 관념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표면적인 제도 등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대신 여러 가지 부작용만 생산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사회 전반에서의 조속한 서양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표면적인 제도 등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제도를 떠받치는 정치/사회의 기초에 관련된 일정한 태도나 가치 의식(예컨대 근대적 기율,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명확한 의식)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원활하고 안정된 사회의 기능을 위해서

는 제도와 기초 태도 두 가지의 영역 사이의 정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어떤 제도의 수립이 외부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자체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질 경우 이러한 점은 큰 문제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와 같이 많은 정치/사회 제도가 외부로부터 전래되어 이식된 사회의 경우 표층의 제도와 기저층의 사회의식 사이의 정합 여부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물론 이 정합이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정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표층의 제도가 그 액면가치대로 움직이지 않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층위 사이의 정합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개념사 연구와 같은 인문학의 작업 방식은 특정 정치/사회의 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검토하는데, 이러한 작업의 원칙은 특정 제도나 개념의 지역적 이동 과정과 그 결과를 이해하는 데 원용되어 연구될 수 있다.

우리가 개념사 연구의 작업을 시도할 때 그 바닥에 깔려 있는 기본적인 문제의식 또는 목적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정치적/사회적 제도 또는 그 제도의 바탕에 깔려 있는 지배적인 사회적 관념을, 그 형성 또는 제작 또는 정착 과정의 검토를 통해 이해하는 일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외래 관념과 토착 관념의 접촉에서 빚어지는 다양한 상호 작용의—이러한 상호 작용은 저항, 갈등, 충격, 조화 등 다양한 모습을 취할 것인데—내용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서양에 있어서의 근대적 국가 관념의 확립

서유럽의 역사 속에서의 국가 개념의 변화 과정은 서유럽에서의 정치사의 변화 과정을 비교적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개념사를 위한 개념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치사의 과정을 이해하는 또 다른 흥미

있는 방식이 될 수 있다. 서양에서의 국가 개념의 확립과 변화의 과정을 우리는 크게 두 개의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중세를 벗어나 근대로 들어오면서 국가를 지칭하는 전통적 개념들을 물리치고 *stato/the state*라는 말이 국가를 칭하는 중심적 이름으로 자리 잡게 되는 과정을 말한다. 이 단계는 구체적으로 절대주의 군주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영토국가의 확립에 상응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 지배자/주민의 인적 요소를 배제한 채 구성된 *stato/the state*의 개념이 성공적으로 정착된 이후 다시 이 *state*가 전체 주민(민족, 국민)과 결합하면서 권력조직이 주민공동체(민족)의 조직이라는 관념이 정착되는 국민국가(*the nation-state*)의 단계를 말한다. 이 단계는 경제적, 문화적 및 지리적으로 통합된 공동체가 그에 합당하는 국가의 틀을 획득하는 단계에 상응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식 관념으로는 국가라는 말로 번역되어야 할 말에서 민족에 해당되는 *nation*의 개념이 사용된 것은 바로 이러한 단계 이후의 일이다. 구체적으로 ‘international’, ‘United Nations’, ‘League of Nations’ 등의 표현은 바로 그러한 변화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삶은, 그 삶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교란시키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 속에서 진행된다. 따라서 사람들은 가능한 한 그러한 불확실성을 제거시키는 공동의 노력을 전개해 왔다. 그러한 불확실성에는 자연적인 것도 인위적인 것도 있는데, 특히 후자에 속하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각종 폭력적 위협을 들 수 있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집합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구체적인 결과가 그러한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강제력의 조직 즉 국가로 태어났다.

서양의 경우 가장 안정적이고 포괄적이며 완성된 형태로 나타난 최초의 국가조직은 로마에 의해 달성된 고대 제국 질서였다. 중앙집권화된 재정, 군사 및 사법 기관을 바탕으로 일정 기간의 안정된, 즉 예측 가능한 삶을 영위

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것을 ‘팍스 로마나(pax romana)’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러한 제국 질서가 붕괴되면서 유럽은 한때 엄청난 혼돈을 겪었다. 이러한 혼란에 대처하는 새로운 제국(카롤링거 왕조)이 일시적으로 출현했으나 당시 주어진 행정, 재정, 군사적 자원의 한계 때문에 중앙집권 질서 즉 통일국가는 단기적 성취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공백 상태를 메우는 임시변통의 질서가 마련되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흔히 봉건제라고 부르는 것이었다.

봉건제의 근간은 실질적인 군사적 자원을 가진 전사계층이었는데, 이들 실력자를 중심으로 짜여진 질서는 기본적으로 분산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분산성은 지속적 무력 경쟁을 유발하는 대단히 역동적인 정치 질서를 낳게 되었다. 이러한 역동성은 구체적으로 보다 강력한 실력자들을 중심으로 보다 큰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강력한 조직의 구축 노력의 과정에서 결과한 지속적 무력 경쟁의 다른 표현이다.³⁾

이러한 무력 과정을 통해서 작은 단위의 조직들은 점차로 큰 단위의 세력들에게 병합되어 우리가 현재 근대 국가(the modern state)라고 부르는, 당시의 행정/전쟁 자원이 허용하는 가장 큰 조직들만이 살아남게 되었다.⁴⁾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상당히 장기간의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진 과정이었다. 그 기간 동안 상당한 양의 무력 충돌이 있었고, 또한 이론적 논쟁과 이데올로기적 설득 작업이 병행되었다.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갖는 국가 개념의 정착 과정은 이 후자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는데, 물론 전자의 작업과 밀접히 연결되면서 이루어졌다는 점은 다시 강조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3) Strayer, Joseph R. and Rushton Coulborn(1956), “The Idea of Feudalism,” in Coulbourn R. (ed.), *Feudalism in Histo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 11.

4) Charles Tilly의 계산에 의하면 1,500년 유럽에는 500개 전후의 독립적 정치조직들이 있었지만, 1900년에는 20여 개의 독립적 정치단체들만이 남게 되었다고 한다. Tilly, “Reflections on the History of European State-Making,” in Tilly(ed.)(1975), *The Formation of National States in Western Europ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 24.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정치조직도 기본적으로는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다른 정치조직을 부르던 이름으로 계속 호칭되었다. 동시에 이 새로운 조직이 갖는 역사적으로 새로운 정치사회학적 특성을 표시하기 위해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the state와 지역별로 약간씩 다르게 표기되는 친척어로 된 일련의 이름들이다. 따라서 서양에서의 국가 개념의 변화 과정은 바로 이러한 실제 역사의 변화 과정을 대단히 잘 반영하는 것으로 얘기될 수 있고, 그런 점을 의식하면서 그 변화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것이다.

1) status/stato의 기원

원래 유럽에서 국가 또는 나라에 대한 전통적 이름으로는 civitas(city), res publica(république, commonwealth), regnum(realm) 등이 혼용되어 오다가 중세 말에 이르면 republic/commonwealth 등으로 정리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다가 새로운 영토적 지배자들이 출현하면서 이들의 배타적 지배 지역을 두고 status regis 또는 status regni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라틴어의 status는 stare, 즉 서다(立, to stand)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뜻은 직립(直立)의 행동 또는 그 양식을 말한다. 여기에서 출발하여 어떤 물건이나 사람 또는 계급, 지역 등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나 자세를 의미하게 되었고, 이 자세는 단순히 물리적 의미를 넘어서 지적, 도덕적 또는 정치적 자세나 입장이라는 의미도 포괄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떤 제도나 정치조직의 기본적 양상 또는 공공복리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되어 사용되었으나, 이 경우 아무런 수식어나 보조어가 없이 status라는 단어 혼자만으로 그렇게 사용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용법으로는 고대부터 자주 사용되었는데, 대표적 예로 키케로의

status reipublicae가 자주 언급된다. 요즘 말로 [공화제] 국가의 상태로 바꿀 수 있는 이 말은 리비우스나 살루스트 같은 로마 고전 작가들에 의해 자주 사용되었던 것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용법은 6세기에 편찬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에 대표적 법고전으로 수록된 3세기 초의 율피아누스의 논의에서도 status rei romanae라는 형식으로 나타난다.⁵⁾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두 개의 중요한 사실은 status라는 단어가 어떤 정치 상황을 언급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는 점과 동시에 아직까지는 부가어 없이 사용된 경우는 거의 없었던 점이다. 이러한 사용례에서 발견되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정체(政體)에 관련된 것이었다.

그 존재가 한동안 잊혀졌던 로마법이 11세기 후반 이탈리아에서 발견된 후 유럽 각 지역에서 재수용되면서 로마법의 법률 용어들이 다시 통용되기 시작했는데, 14세기에 이르러서는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왕국의 상태(공공복리)(status regni, the state of the realm 또는 estat du roilme)에 관해 논의하는 일’이 일상사가 되었다고 한다. 12세기에 이미 status는 국가(city, republic)의 공공복리 또는 공공안녕(public welfare, utilitas publica)의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이 관념은 시간이 가면서 국가의 수장 또는 그의 대리인들의 권력과 연관되게 되었다.⁶⁾ 이러한 의미의 status는 공공의 편익(utilitas publica)이라는 뜻으

5) Publicum ius est quod ad statum rei Romanae spectat(“Public law is that which pertains to the status rei romanae.”)(D.1, 1, 1, 2). 이 status rei Romanae라는 구절은 (로마의) 헌정 질서와 공공 권위의 법률로 이해된다. 이 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로는 Post, Gaines(1964), *Studies in Medieval Legal Thought: Public Law and the State*, 1100~1322,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336~339 참조.

6) Post, Gaines(1964), 앞의 책, pp. 338~340. Post는 status가 공공복리(안녕)에서 통치자의 권력으로 확장된 논리적 과정을 다음과 같이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status regis와 status regni는 모든 사람의 복리의 문제를 건드린다. 모든 사람의 공동 이익과 실용을 건드리는 것은 국왕과 왕국의 공공복리(안녕)의 문제를 건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공공의 업무는 국왕의 권위(potestas)와 지위의 행사를 건드리고 또 요구한다”(p. 362). 12세기에서 14세기 사이에는 국

로 확장되어 건재하는 공동체(salva respublica) 또는 공공복리(common wealth)의 의미를 띠게 되었다.

이 status라는 단어가 정치학적으로 더욱 활발하게 사용된 것은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들을 배경으로 한다. 13세기 이후 특히 14세기 이후에 활발해진 정치 문제에 관련된 논의는 이 당시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다수의 자치도시 또는 도시국가들의 흥망성쇠를 그 배경으로 한다.

전통적인 봉건 질서 속에서 확실한 지위의 인정이 애매했던 소규모 자치도시국가들의 존재론적 지위 확보를 위한 새로운 정치적 담론의 구성을 위한 대표적 작업으로서 일반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Politica)』의 라틴어 번역과 보급이 언급된다. 왜냐하면 이 책에서는 처음으로 다양한 정체의 존재가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특히 이러한 점은 전통적인 세습군주국들의 틈바귀 속에서 이 세습군주체제에 대해 적대적 태도를 취했던 피렌체나 베네치아의 공화정 이론가들에게는 중요한 이론적 자원의 확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들에게 있어 복수의 정체론은 단순한 비교정치의 논의를 넘어서는, 즉 자신들의 공화정체의 존재를 당연한 것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이론적 자산이었다.

『정치학』의 라틴어 번역을 통해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소개한 토머스 아퀴나스는 status를 정치조직의 상태 또는 현황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했는데, 이를 통해 status는 그리스어의 kratos 그리고 라틴어의 dominatio와 같은 의미를 갖는 단어로서 이해된 것이다.⁷⁾ 이러한 사용을 통

왕의 상태와 왕국의 상태의 두 가지 개념은 서로 교환되어 사용되었는데,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개인으로서의 국왕과 왕국/공권력이 명백히 구별되지 않고 사용되었다는 사실이다. Weinacht, Paul-Ludwig(1968), *Staat: Studien zur Bedeutungsgeschichte des Wortes von den Anfängen bis ins 19. Jahrhundert*, Berlin: Duncker & Humblot, p. 58 참조.

7) Rubinsten, Nicolai(1971), “Notes on the Word Stato in Florence before Machiavelli,” in Rowe, J. and W. Stockdale(eds.) *Florilegium Historiale*, Toronto: Universty of Toronto Press, p. 315.

해 stato라는 이탈리아어의 단어의 의미 폭이 넓어지게 되었는데, 따라서 14세기 피렌체인들은 자신들의 정부 형태를 popolare stato 또는 popularis status로 지칭했다.

당시 정치적 정당성 기반이 아직 취약했던 새로운 정치 지도자들을 상대로 한 정치 조언서 또는 귀감서 등이 많이 출현했는데,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효과적으로 통치하는 군주 또는 지배자의 지위를 획득하고 유지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다. 여기에서 그 지위를 지칭하는 말은 바로 status/stato였다. 따라서 르네상스기 이탈리아 정치담론의 중심 주제가 status/stato로 된 것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로 보인다. 그리고 이 status/stato라는 단어가 뒤에 국가를 지칭하는 말로 정착하는 데에는 이들 이탈리아의 논객들의 작업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⁸⁾ 또한 status/stato는 기왕에 civitas/città라는 말로 지칭되던 정치공동체 안에서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기관/조직/구조 또는 권력 지위를 의미했는데, 이 status/stato의 유지는 기왕의 특정한 권력 배분 구조(방식)의 유지를 전제하고, 따라서 동의어가 되었다.⁹⁾ 이렇게 되면서 정치적 지위를 뜻하는 status/stato는 civitas/città 안의 특정한 권력 배분 구조 즉 정체를 의미하는 말이 되었고, 따라서 status/stato은 civitas/città와 구분되게 되었다.

르네상스 시기의 이탈리아에서 stato는 기본적으로 정권 또는 집권자의 지위 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영토에 대한 통제력 또는 장악력을 가져야만 하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stato에는 영토 또는 영토에 대한 지배력의 의미가 부가되고, 이 점은 시간이 가면서 더욱 선명해졌다.

8) Skinner, Quentin(1989), "The State," in Ball, Terence, Farr, James and Hanson, Russell L.(eds.), *Political Innovation and Conceptual Chan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96~97.

9) Skinner, Quentin(1989), 앞의 논문, p. 98.

독립적인 말로서 stato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¹⁰⁾ 마키아벨리도 이 정의와는 무관하게 당시까지 관행적으로 정체의 의미로 stato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로 『군주론』 5장에서 과두정의 의미로 사용되는 stato di pochi라는 말을 들 수 있다. 그럼에도 마키아벨리가 쓰고 있는 stato라는 말은 권력 구조, 권력 지위 또는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행정의 기구 등을 의미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¹¹⁾ 마키아벨리에게 있어서 stato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첫째 통치자/지배자의 권위 또는 영향력, 다음으로는 통치 권력의 지배 하에 있는 지역 및 대상물, 그리고 끝으로 군주 및 그의 일당을 의미한다. 위에서 지적된, 주격으로 사용되는 7~8회는 모두 세 번째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stato는 어떤 경우에도 국가 일반을 지칭하는 societas civilis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는 없다는 점이다.¹²⁾

위와 같은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의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국가 관념은 16세기 중반 프랑스에도 전파되기 시작했다. 1568년에만 해도 아직 고위 통치 업무의 수행이라는 일반적 의미로 이해되던 'gouvernement de l'estat'라는 표현은 1599년에 이르면 국가(Estat et Empire)의 통치라는 의미로 미묘한 의미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지적된다. 즉, 프랑스 국가는 지리적 구획에서 지배조직으로서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는 아직은 절대주의적 관념이 완전히 수용되기 이전이었다.¹³⁾

10) 『군주론』 1장 첫 문장에서의 定義를 말함.

11) Hexter, John. H.(1973), *The Vision of Politics on the Eve of the Reformation*, New York: Basic Books, pp. 156~160; 국내 문헌으로는 박상섭, 2002, 『국가와 폭력』, 서울대학교출판부, 239~242쪽 참조.

12) Weinacht, Paul-Ludwig(1968), 앞의 책, p. 62. 19세기 특히 헤겔 이후 civil society는 국가와 구분되는 시민사회였지만, 그 이전의 civil society는 국가 또는 나라의 의미로 사용되는 commonwealth나 republic의 다른 이름이었던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3) Weinacht, Paul-Ludwig(1968), 앞의 책, p. 63.

2) 국가 이성

이러한 stato 개념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17세기 초에 유행하기 시작한 국가 이성의 담론이었다. 특히 그러한 그 담론의 대표적 논객들은, 비록 예컨대 장 보댕에서 보이듯이 질적으로 변화된 국가의 새로운 양상을 지적하거나 홉스와 같은 새로운 철학적 기초를 놓는 시도를 보이고는 있지 않지만, stato라는 단어가 근대 초 유럽의 정치 담론에서 더 이상 피하거나 제외할 수 없는 개념으로 정착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지적된다.¹⁴⁾

국가 이성의 개념은 여러 가지의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는 논의로 사용되었는데, 실제 우리의 논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17세기 전체에 걸쳐 state/status라는 단어가 논의된 것은 거의 전적으로 국가 이성(ragione di stato, ratio status)의 논의 맥락에서였다는 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빈번하게 논의되는 과정에서 status/state를 한정하는 수식어가 떨어져 나가고, 그 단어가 독립적으로 사용되면서 점차 당시까지 국가 일반을 지칭하는 res publica/civitas와 사실상의 동의어로 사용되기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그 결과 바이나하트가 지적하고 있듯이, 국가(state/status)는 17세기 중반 이후 애매하고 또한 오해를 유발하기는 했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정치의 단어로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얻게 되었고, 후에 우선적으로는 대내적인 그리고 다음으로는 대외적인 통일의 개념으로서 간주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과정에서 state/status는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아우르고, 또한 다양한 종류의 정치공동

14) Brunner, Otto, Werner Conze, and Reinhart Koselleck (eds.), *Geschichtliche Grundbegriffe*, vol. 7, "Staat and Souveränität" 항목 중 "국가 이성 개념의 수용" pp. 12~17 및 Tuck, Richard (1993), *Philosophy and Government, 1572~165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h. 4 참조.

체를 대표하는 상위개념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¹⁵⁾

3) 장 보댕과 토머스 홉스

근대적 국가 개념이 확립되는 과정은, 경험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정치조직을 포괄할 수 있는 이론적 추상화를 바탕으로 설정된 국가의 개념이 하나의 독자적 실체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를 표상했던 두 가지의 인격체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즉 탈인격화의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¹⁶⁾ 하나는 전통적 의미의 국가인 polis/civitas를 다스리는 인물들 즉 군왕 또는 다른 최고 통치자와 분리된 독자적 기관으로서의 국가 개념이다. 다른 하나는 구성원(politeuma)의 성격에 따라 규정되는 정체(politeia=regime)의 개념을 통해서만 이해되던 아리스토텔레스적 국가 관념¹⁷⁾으로부터 해방된, 즉 주어진 정체의 성격과 무관하게 별개로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추상화된 국가 관념(개념)의 발전이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적 국가 관념은 비단 고전 그리스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고 고전 로마 헌정사상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기도 했다. 즉, 국가는 아직 그 구성분자로서 시민들의 상위에 존재하는 별개의 실체로서 이해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다시 중세 법률 사상에 그대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지적된다. 구성원들과는 별개의 실체로 인식되는, 또는 정체의 변화와는 무관하게 독자적인 양태로

15) Weinacht, Paul-Ludwig(1968), 앞의 책, pp. 171~172.

16) 이 문제에 대한 명백한 지적은 Shennan, J. H.(1974), *The Origins of the Modern European State, 1450~1725*, London: Hutchinson, p. 9, pp. 113~114; Mansfield, Harvey C.(1983), "On the Impersonality of the Modern State: A Comment on Machiavelli's Use of *Stato*,"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7 pp. 849~850; Skinner, Quentin(1989), 앞의 논문, pp. 112~113.

17) Politics 1278b(1983), '...A constitution (or polity) may be defined as 'the organization of a polis, in respect of its offices generally, but especially in respect of that particular office which is sovereign in all issues.'

존재한다는 국가라는 개념의 발전은 근대 국가 개념의 핵심적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¹⁸⁾

국가와 통치자를 별개로 보는 논의의 제출은 강화된 절대주의에 대한 저항과 관련하여 촉발되고 증폭된 신구교 간의 종교 갈등의 맥락 속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졌다. 기왕의 지방분권적 정치체제를 극복하고 중앙집권체제를 달성하려는 노력은 귀족세력으로부터 심각한 저항을 야기했던바 프랑스의 경우 흔히 폭군방벌론자(monarchomaques)라는 집합적 이름으로 불리는 일단의 급진적 칼뱅주의 정치 이론가들의 출현을 자극했다. 이 집단의 이론가들이 내세운 정치적 주장은 기본적으로 군주도 자신이 만든 법에 구속되는 것이고, 그 법을 위반한 폭군에 대한 저항이 합법적이고 합헌적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국왕에 대한 저항의 정당성에 관한 논의 그 자체보다는 그러한 주장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국왕과 왕국이 별개라는 점에 대한 인식의 정착이다.¹⁹⁾

폭군방벌론자들의 입장에 반대하여 정치의 종교적 중립성의 입장에서 정치적 안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던 장 보댕의 주장에서도 지배자인 국왕과 국가의 분리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여기에서 우리가 흥미롭게 보아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즉, 정치적 안정을 위해 모두가 당연히 복종해야 할 정치적 권위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한편, 이러한 자신의 주장을 역사적으로 존재한 다양한 국가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지지하는데, 여기에서 도출된 것이 바

18) 바로 이러한 점이 근대적 국가의 관념과 그 이전의 국가 관념을 가르는 결정적 기준으로서 애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 대한 대단히 명확한 언명으로서 Post(1964), 앞의 책, p. 12 참조. 정부기관과 주민들과 분명히 구별되는 실체로서의 국가의 관념의 확립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과정이었는데, 가장 중요한 계기는 공동체 전체에 닥치는 명백한 위기 상황과 이것을 전체의 이름으로 해결할 의무와 그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특권을 보유하는 국왕의 역할이라고 지적된다. 이에 관해서는 Post(1964), 앞의 책, pp. 318~319 참조.

19) Skinner, Quentin(1978), *The Foundations of Modern Political Thought*, vol. II,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314.

로 주권(主權, souveraineté)의 개념이다.

이러한 주권의 주체로서의 국가는 이미 재래의 civitas/respublica의 이름으로 불리던 그러한 국가와는 일정한 거리가 있으나 보댕의 경우 그러한 사실을 의식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새로운 이름인 estat를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우선 자신의 책 제명에서 그는 estat를 사용하지 않고 보다 전통적인 republique를 사용하고 있다. *Les six livres de la republique*. 1586년에 발간된 라틴어 번역본에서도 respublica를 사용하고 있는데, 1606년에 발간된 Knolles의 영역에서도 state라는 이름 대신에 *The Six Bookes of a Commonweale* 이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estat라는 용어가 전혀 사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사용되는 대부분의 경우 그는 '자신의 estat를 유지하고 있는' 지배자 등 재래적 방식으로 그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때로는 estat를 republique의 동의어로 사용하기도 한다.²⁰⁾ 그러나 때로는 estat 그 자체는 불가분의 주권체로서 말하기도 한다.

기왕의 civitas/respublica의 이름으로 불리던 국가와는 달리 지배자와도 그리고 집합적 실체로서 시민 전체 또는 공동체 전체와도 분명하게 구분되는 별개의 독립된 실체로서의 국가의 개념을 역사상 처음으로 가장 명료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홉스에 있어서도 state라는 말을 바로 사용하는 것이 주저되기는 마찬가지였다. 예컨대 1651년에 출간된 *Leviathan*의 부제는 *The Matter, Forme and Power of a Commonwealth Ecclesiasticall and Civil*로 되어 있다. 다만 홉스는 서문에서 자신의 commonwealth는 곧 state이고, 이것은 라틴어로는 civitas를 말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state라는 말 대신에 commonwealth를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state라는 말의 사용을 상당히 주저하고 있음을

20) Skinner, Quentin(1989), 앞의 논문, p. 120.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주저는 홉스 자신의 주저라기보다는 그의 독자들이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던 언어 관행을 일거에 무시할 수 없었던 필자의 사정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642년에 출판한 『시민론(De Cive)』에서 홉스는 자신의 저술 목적을 “사람들이 상호간의 동의를 통해 기초가 잘 잡힌 국가로 키워 가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당시까지 commonwealth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국가의 문제를 논의하면서 굳이 state라는 새로운 이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던 것은 그의 이론적 관심이 이미 과거의 polis/civitas를 중심으로 한 정치 이론과 다른 곳에 있었다는 점을 말하고자 한 그의 의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4) 사회계약적 국가 개념의 거부와 유기체적 국가 이론의 출현

고대 아리스토텔레스 및 중세 기독교의 영향을 벗어난 새로운 국가 이론을 제시한 홉스의 정치학은 새로운 절대주의 군주제의 현실에 부합하는 정치 이론으로 평가된다. 기존의 봉건영주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영토적 지배자(the territorial ruler)로서의 절대주의 군주의 정치적 의미를 이론적으로 확립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재정적으로 시민사회를 바탕으로 존재하되 시민사회로부터 독립되어 존재하는 별개의 정치적 실체로서의 국가의 개념을 확립함으로써 그러한 정치적 작업을 수행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작업 자체보다는 오히려 그 작업의 수행을 위해 그가 마련한 설명 방식, 즉 종교적 권위가 아닌 세속적 욕구와 필요를 바로 정치 권위의 존재 이유와 맞게 한 논의 방식에서 홉스의 자연법 이론의 더 큰 의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홉스가 제시한 자연법 이론은 기성의 모든 도덕적 원리가 불신의 대상이 된 시점에서 누구에 의해서도 부정할 수 없는 최소한의 도덕원리를 바탕으로 강력한 정치 권위, 즉 주권의 필요성을 도출

해 내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최소한의 자연적 도덕원칙은 자연권으로서의 자기보존의 욕구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권은 무제한으로 방치해 둘 경우 상호 불신으로 인한 전쟁 상태가 불가피하게 결과할 것이기 때문에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자연법이 제안된다. 이러한 자연법의 명령은 그것에 복종하지 않을 경우 안전을 위한 보장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권위체, 즉 그가 레비아탄이라는 구약 성경(욥기) 속에 나오는 괴물의 이름을 딴 주권자를 만들고 이것에 복종할 것을 상호 계약을 통해 약속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명령과 복종의 틀을 그는 국가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국가는 사회구성원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주권자를 말하고, 이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다.

이때 사람들이 그러한 국가 성립을 위해 계약을 맺는 동기로는 자신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도모한다는 물질적 이익의 관념이 제시되고, 그러한 계약을 통해 만들어지는 결사는 개인들 사이의 기계적 결합에 불과한 것으로 얘기될 수 있다. 따라서 홉스의 국가 개념, 즉 전체 시민이라는 인적 요소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독립된 실체로서의 국가의 개념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으나 개인의 물질 동기에 바탕을 둔 기계적 결합으로서의 국가는 현실에서 경험되는 국가와 거리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기계적 결합으로서의 국가 관념의 개인주의적 요소에 대한 강력한 대안으로서 조국애라는 감성적 요소에 입각한 정서적 결합의 이론이 제시되었는데, 이것은 홉스 이론의 상당 부분에 동조하면서 동시에 홉스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했던 루소의 작업이었다. 사람들이 “정부(情婦)의 사랑보다 수백 배 강렬하고 감미로운 조국애”²¹⁾를 갖게 되면 도덕적 통일체

21) 루소(2004), 「정치경제론」, 김용구 편역, 『장 자크 루소와 국제정치』, 도서출판 원, 141쪽.

로서의 국가공동체는 기계적 결합을 훨씬 넘는 강력한 사회적 유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국애는 어떻게 생기는가? 이것은 올바른 사회계약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인데, 루소는 바로 이 올바른 사회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론적·이상적 과정을 그의 『사회계약론』에서 그리고 있다.²²⁾

루소는 홉스식의 결사체 이론, 즉 개인의 이익을 출발점으로 하는 합리주의를 비판하지만 개인을 바탕으로 하는 계약 사상을 자체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계약 사상의 완전한 부인은 데카르트식 기계적 자연관을 비판하고 대안으로 제시된 독일의 라이프니츠의 단자(monad)의 개념과 이것을 바탕으로 하는 유기적 우주관이 사회 이론에 적용됨으로써 가능해졌는데, 이러한 작업은 독일 낭만주의 운동과 부분적으로 연결되는 독일의 헤르더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는, 국가란 인위적 제작에 의한 일시적인 단체가 아니라 성장의 결과로 이루어진 유기체로 보아야 한다는 신념을 제시한다.

헤르더에 따르면 개인이 태어날 때 그는 이미 가족, 씨족 또는 민족(Volk) 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태어난다. 따라서 사회 상태가 인간의 자연 상태이다. 따라서 개인이란 추상화된 개념이고, 따라서 사회계약을 상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는 그 구성원인 개인들이 서로 내부적 관계에 의해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 전체로서 외부에서 비롯하는 힘에 의해 기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단순한 집합체와는 다르게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된다.

이러한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추론(推論)의 능력(이성)과 그 능력의 외부적 표출인 언어의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 언어를 통해 인간은 자아를

22)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용민, 2004, 『루소의 정치철학』, 인간사랑, 제6장 참조.

인식하고 자아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시킨다. 이러한 과거와 미래를 공유하는 일정한 집단이 자연스럽게 성장하는데, 헤르더는 이러한 집단을 민족(Volk)이라는 말로 부른다. 그에 따르면 여기에서 정치적 결사의 가장 자연스럽게 유기적인 기반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한다. 이때 자연스럽게다는 표현은 강제의 부재를 말하는데, 이러한 민족(Volk)에 입각한 국가야말로 가장 자연적인 국가로 단순히 단일 주권자에 정치적으로 복종하는 사람들의 집단으로서의 국가와 구분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국가가 곧 독일에서 독특하게 성장한 문화국가(Kulturstaat)의 개념이다.²³⁾

헤르더가 가장 자연스러운 결사체로서 민족(Volk)을 말할 때 그가 염두에 두었던 것은 독일 민족이 아니라 슬라브족이었다. 그러나 헤르더의 민족론을 바탕으로 통일국가라는 인위적 작업에 성공한 것은 독일인들이었다. 독일은 오랫동안 지리적 명칭으로서만 존재해 왔고, 그에 합당한 정치적 통일체는 결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문화적, 언어적 통일체 개념으로 보완되고 있었으나, 프랑스 혁명의 여파로 이루어진 나폴레옹의 침공으로 독일이라는 단일체는 환상임이 판명되었고, 이것을 철학적인 수준에서 논의한 것은 철학자 헤겔이었다.

헤겔은, 나폴레옹의 침공을 직접 경험했던 1801~1802년 사이에 저술했고, 사후에 출판된 『독일헌법론』이라는 정치논설에서 독일은 더 이상 국가가 아니라고 단언했다. 국가가 진실로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무력을 바탕으로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오랫동안 단일체 의식에 젖어 있던 독일은 프랑스의 침공을 계기로 이러한

23) 유기체로서의 Volk의 개념과 관련된 주제에 관한 Herder의 글들은 아래의 책에 발췌되어 묶여져 있다. Barnard, F. M.(tr. & ed.) (1969), *J. G. Herder on Social and Political Cultu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특히 편자의 Introduction, pp. 3~60은 대단히 유용한 소개를 하고 있다.

능력이 없음을 보여 주었고, 따라서 독일의 국가 환상은 깨졌다. 따라서 독일은 더 이상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었다.²⁴⁾

이러한 국가 부재에 대한 인식은 국가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자극하는 촉매로 작용하여 국가의 성공을 누린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발전되지 않았던 근대 사회 속에서의 국가에 관한 전면적인 철학적 성찰을 낳았다. 그 결과는 개인주의적, 원자론적 관점에서 구성된 사회계약설의 개념에 대한 근원적 비판을 바탕으로 한 실재적 통일체로서의 국가사상이었다. 헤겔이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은 논지는 인간의 자의식은 공동체 성원간의 상호 인정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명제이다. 이러한 인정은 '시민사회적' 관계가 아니다. 즉, 그의 논의의 출발점은 추상화된 개인과 인권의 개념이 아니라 공동체와 그것을 움직이는 기본이념으로서의 인륜성(Sittlichkeit)의 이념이다. 영국과 프랑스의 정치 이론에서 그려지는 계약으로 맺어지는 이익 추구 활동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 활동의 총체는 국가가 아니라 시민사회(bürgerliche Gesellschaft)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는, 국가보다 저급한 영역으로 규정된다.²⁵⁾ 시민사회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실체로서의 국가 개념의 확립은 주민 또는 공동체로부터 독립된 명령과 복종의 질서를 존재론적으로 확립시켜 주는 또

24) Hegel, G. W. F., "German Constitution(1798~1802)," in Hegel(1999), *Political Writings*, eds, Dickey, Laurence and Nisbet, H. B.,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6~101.

25) "시민사회"의 개념은 유럽사에서는 전통적으로 나라 또는 국가의 의미를 갖는 말이었다. 사회는 개인들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무리를 만든 것인데, 이때 civil이라는 말은 원래 라틴어의 civitas의 형용사형인 civilis의 영어식 표현으로 공적, 국가적이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였다. 즉, 사람들이 공적인 목적을 위해 합의 또는 계약을 통해 만든 결사체라는 의미의 단어였다. 그러나 헤겔에 와서 국가와 구분되는 국가의 하위 결사체, 즉 개인들이 자신들의 사적 목적을 위해 만든 결사체라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 점에 관해선 Riedel, M.(1984), 'State' and 'Civil Society': Linguistic Context and Historical Origin, in Riedel *Between Tradition and Revolution: The Hegelian Transformation of Political Philosophy*, tr. by Walter Wrigh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29~156 참조. 사회계약설에 입각한 국가 이론에 대한 비판은 헤겔의 『법철학』 para. 258에서 잘 개진되고 있다.

다른 방식의 근대적 국가 개념의 확립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윤리적 실체로서 규정되는 국가를 지키는 작업은, 기성 도덕의 관점에 반하는 것일지라도 그 자체가 새로운 윤리적 의미를 지니는 작업이 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그는 권력의 조직으로서의 국가는 단순한 힘의 투쟁을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윤리적 필연성을 갖는 실체로 규정한다. 이렇게 하여 현실적인 권력조직으로서의 국가와 인간성의 실현을 위한 도구로서의 국가라는 이상은 헤겔 속에서 하나로 통일될 수 있는 계기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가의 이상화 작업은 불가피하게 19세기 초의 혁명전쟁과 독일 민족주의라는 구체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특히 1813년의 해방전쟁을 계기로 독일민족주의 운동은 군사국가로서의 자부심 위에서 전개될 수 있었다. 이러한 민족주의적 자각과 자부심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출되었는데, 특히 독립된 정치적 개체로서의 자의식을 표현하고 있는 각종 사회 이론들을 통해 표출되었다.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된 사회 이론들은 분명히 드러나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문명의 표준으로 인정되던 서유럽, 특히 영국과 프랑스의 이론과 구별되는 독일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냈다. 뒤에 '역사주의'라는 집합적 이름으로 불리게 된 이 이론들은 영국과 프랑스를 상대로 문화적 상대주의를 내세웠고, 국가라는 틀의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했다.²⁶⁾ 당시 다른 민족주의 논객에 비해 민족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극도로 자제하던 헤겔도 지극히 추상적인 용어로 민족을 바탕으로 하는 국가조직의 역사성을 다음과 같은 함축적인 말로 요약하고 있다. "국가로서 조직된 국민(Volk als Staat)은 자기의 실체적 합리성과 직접적 현실성을 띠고 나타난 정신이며, 따라서 이

26) 이 점에 대해서는 Iggers, George(1983), *The German Conception of History: The National Tradition of Historical Thought from Herder to the Present*, Middletown, Conn.: Wesleyan University Press 참조.

것은 지상에서의 절대적 힘이다. 바로 이러한 까닭에 한 국가는 타국에 대한 주권의 독립성을 지니는 것이다.”²⁷⁾

프랑스의 침공과 프러시아에 의한 효과적 퇴치는 헤겔을 포함한 많은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자들을 국가 중심의 현실주의적 민족주의자로 바꾸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는데, 이러한 새로운 지적 환경은 국가 현상에 대한 체계적 연구 작업을 위한 초석이 되었다. 이러한 작업은 정치 현상을 직접 다루는 역사학과 법학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지속되었다. 특히 이러한 작업은 지금까지 정치적 통일체를 이루지 못하고 있던 독일의 정치제도 및 법제도의 공준(公準)을 발견하고, 또한 확립한다는 고도의 실천적 목적을 갖고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독일의 국가적 법제(Staatsrecht)를 발견하는 학문, 즉 국법학(Staatsrechtslehre)으로 성장했음은 잘 아는 일이다.

이러한 경향을 대표하는 19세기의 학자로는 몰(Robert von Mohl)과 그의 후계자였던 블룬칠리(Johann Kaspar Bluntschli)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의 논의는 협소한 의미의 법학이 아니라 사회학적 및 역사학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국가 문제의 탐구이다. 이러한 작업은 어떤 특정한 국가 즉 독일에 국한된 제도의 논의가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를 바탕으로 하는 국가제도의 논의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일반국가학’이라고 부르는 논의이다. 앞서 언급된 블룬칠리가 그러한 작업을 처음 시도했고, 20세기 초엽까지 활동했던 옐리네크(Georg Jellinek)의 『일반국가학(Allgemeines Staatslehre)』이 이 분야의 대표적 업적으로 지적된다.²⁸⁾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독일의 국법학 또는 국가학 전통이 던지고 있는 반사회계약적, 반개인주의적 국가관의 기본적 관점이 이미 18세기에 시

작되었고, 19세기 초 역사주의 전통의 사회 이론을 통해 확립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들이 말하고 있는 국가는 이미 정치적 상황의 구체성을 완전히 추상화한 채 만들어지는 흡스식 주권적 정치 권위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공동체의 외피로서의 국가를 말한다. 분석적인 면을 강조하여 국가와 민족 두 개념의 엄격한 분리를 고집하는 이론적 입장에서 볼 때, 근대 국가는 여전히 만들어진 현실에 불과하다. 독일의 국가학자들 가운데 보수적인 입장과 가장 거리가 있는 헤르만 헬러(Hermann Heller) 같은 학자까지도 “국가조직은 인간의 개인적 실존에 깊이 스며들어 있고, 그의 존재에 형식을 부여하고 있다”²⁹⁾라고 말함으로써 만들어진 기계적 실체 이상의 무엇인가를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독일 학자들 가운데에서 가장 흡스적인 입장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 막스 베버도 근대 국가를 포함하는 대규모 정치단체들을 죽음의 의미를 불어넣을 수 있는 능력의 조직으로 봄으로써 독일 전통에 충실한 듯이 보인다.³⁰⁾ 그러나 베버는 지상의 최고의 존재로서 국가를 말할 때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민족을 언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비판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국가가 지상에서의 최고의 그리고 궁극적 원리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올바르게 이해된다는 전제 하에 옳은 말이다.... 국가는 지상의 최고의 권력조직이다.... 그러한 논의가 국가에만 관련된 논의이고 민족을 논의의 속에 고려하지 않을 때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다.”³¹⁾

물론 독일에서의 국가 관념이 여기에서 멈추는 것은 아니다. 또한 헤겔을

29) Heller, Hermann(1963), *Staatslehre*, 3rd ed., Leiden, p. 251.

30) Weber, Max(1946), “Religious Rejections of the World and Their Directions,” in Gerth, H. H. and C. W. Mills (eds.), *From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 333~340.

31) 이 인용은 1916년 8월 12일자 *Fränkischer Kurier*라는 신문에 보도된 내용으로 Mommsen, Wolfgang(1984), *Max Weber and German Politics 1890~1920*, tr., M. S. Steinber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 238에서 인용.

27) 헤겔(1989), 『법철학』, 임석진 역, 지식산업사, para 331.

28) 이 책의 한국어 번역으로는 김효전, 2005, 『일반국가학』, 법문사.

비판하면서 동시에 헤겔의 전통 위에 서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에서의 부정적 국가 이론도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 한편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미국에서도 나름대로의 (부정적) 자유주의적 국가 이론이 만들어진다. 그럼에도 우리가 독일에서의 국가학/국법학 전통에만 논의를 집중하여 온 것은 후에 한국에서의 근대적 양식의 국가문제의 토론이 개인주의보다는 유기체 이론에 가까운 독일 국가학 전통을 원용하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독일에서의 국가 개념은 순수한 통치 질서 그 자체에 대한 논의라기보다는 민족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조직되기 시작한 독일의 독특한 역사 상황을 충실히 반영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독일에서의 국가론은 홉스가 시도한 것과는 다른 수준에서의 논의로 여겨진다. 홉스가 제기한 논의는 특정 시기와 장소를 넘어서는 추상적 수준에서의 정치권위의 발생을 다룬 철학적 논의라면, 독일에서의 논의는 그보다는 구체적 정치 상황을 전제로 한 경험적 논의였다.

어쨌든 간에 후일 19세기 말, 20세기 초 동아시아에서 서양 이론의 수용을 바탕으로 정립되어 통용되던 국가론은 오랫동안 단일국가에 의해 조직됨으로써 분명한 개체성 의식을 갖는 민족 집단의 정치적 부활이라는 정치적 목적과 관련하여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독일에서 발전된 국가론에 더 큰 친화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미 오랫동안 국가 생활의 경험 때문에 굳이 효과적인 정치 권위의 수립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로 성립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동아시아 전통에서의 국가

한국이 포함되는 동아시아 문명권 즉 중국 중심의 유교문명권에서의 국가

생활 경험은 서양에 비해 더 오래되었고, 또한 더 지속적이었다. 서양의 경우 고대 제국이 멸망하면서 '국가 부재'의 봉건제 시기를 경험한 데 비해 동아시아에서는 왕조의 변화는 있었어도 서양의 중세에 비교되는 단절의 시기는 경험하지 않았다. 또한 상대적으로 안정된 정치 질서를 바탕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통합된 주민공동체가 만들어져 왔다. 이렇게 국가 생활의 역사가 지속적이었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 기성의 국가의 개념은 크게 도전받지 않았고, 따라서 국가 그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은 서양에 비해 크지 않았다. 따라서 국가 그 자체에 대한 심도 있는, 즉 국가 질서의 수립이나 본질에 대한 성찰이나 그것을 둘러싼 심각한 토론이 있지는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에 대한 관념은 대단히 안정적이었던 것으로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고대에 확정된 안정된 국가 개념은 19세기 서양의 충격을 느끼면서 처음으로 동요되었는데, 그 동요는 기본적으로 국가에 관한 원론적 토론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으로 표현되었다.

1) 중국사에서의 천하와 국가

중국사에서 최초의 중앙집권적 제국인 진(秦)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통일된 국가를 상징하는 '천하일가(天下一家)' 즉 일가(一家)로서의 천하(天下)의 개념이 만들어져서 하나의 지배질서를 의미하는 家에 의탁하여 천하를 설명하는 논의가 전국시대에 처음으로 제출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표현이 처음 나타나는 것은 『순자(荀子)』가 처음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순자는 천하라는 표현 대신에 사해(四海)라는 표현을 쓰지만(「의병(義兵)」: 사해지유(四海之猶如一家)), 중요한 것은 하나의 지배질서 즉 일가(一家)를 이루고 있는 인간 세상에 대한 의식이 출현했다는 점이다. 천하일가(天下一家)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처음 나타난 것은 진시황제의 전국통일 사업에 관련하여

언급하고 있는 「역산각석문(嶧山刻石文)」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로도 천하를 일가(一家)로 만드는 일에 관한 표현은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전부 진한제국(秦漢帝國)의 성립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천하의 병합통일이라는 현상 내지는 천하일통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을 천하일가라고 표현한 사례는 후대에도 종종 보인다. 따라서 당시 국가 총체가 확실히 하나의 家로 이해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³²⁾

천하일가라는 표현은 보통 가내(家內) 질서와 동질적인 국가 질서 내지는 가내의 지배구조가 의제적으로 확대되어 성립하는 국가 구조를 시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家를 國이나 천하의 원형으로 보는 것은 중국인 특유의 사상이었던 것으로 지적된다. 家는 부자(父子)간의 효(孝)를 매개로 하고, 國은 군신(君臣)간의 충(忠)을 매개로 하는 불평등관계 속에서의 헌신을 의미하는 사회관계로서 그 기능하는 장소만 다를 뿐 기본적으로는 같은 사회 조직의 원리로 여겨진다. 말하자면 천하나 國은 큰 가족이고, 가족은 작은 천하로 여겼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를 바탕으로 國은 국가(國家)로, 천하는 천가(天家) 또는 천하일가(天下一家)라고도 불렀던 것이라고도 한다.³³⁾

『논어(論語)』 「계씨(季氏)」 편에 “孔子曰: ‘祿之去公室, 五世矣’ …”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때 공실(公室)은 노국(魯國) 조정을 의미하는 말이었다.³⁴⁾ 한대에 와서 공실은 왕실, 제실, 황가 등 황제의 일가만을 국한해서 지칭하는 말로 바뀌었다. 한편 『묵자(墨子)』 「비유(非儒)」나 『한비자(韓非子)』 「내저설(內儲說)」에서는 위에서 인용한 『논어』의 내용이 다시 언급되면서 공실을 공가(公

家)로 바꾸어 표기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先秦)에서는 공가와 공실이 동의어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모두 사가(私家)와 대비되는 제실(帝室)을 의미하는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황제의 집인 제실도 家인 점에서 좋은 이름이지만, 다만 다른 모든 家와는 달리 비교할 데가 없는 유일한 ‘공(公) 권(權)을 소유하는 일가였다. 따라서 황제의 家는 공권을 직접 표시하는 公, 官, 또는 皇帝라는 칭호에서 유래하는 皇과 帝, 더 나아가서는 천하일가(天下一家)의 관념에 기초한 天이라는 글자들과 결합하여 공가(公家), 관가(官家) 또는 황가(皇家), 황제(帝室) 및 천가(天家)라는 이름이 만들어졌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國이라는 단어가 公, 官, 帝 등과 동열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경우 국가라는 말은 공가나 관가라는 말과 같은 위치에 놓을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점에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³⁵⁾ 즉 국가는 사가(私家)와 구별되는 최고통치자 또는 최고지배자의 집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고, 여기에서 확대되어 조정 그리고 이 최고지배자의 지배기구, 나아가서는 지배 영역 전체를 의미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국가의 성어는 주대(周代)에 이르러서는 주실(周室) 또는 이에 비견될 수 있는 다른 공실(公室), 즉 읍제적 국가 체제 하의 지배자 일족 또는 그 일족이 지배하는 국토를 의미하는 것으로 되었다.³⁶⁾ 그리고 진한제국의 성립에 따라 국가는 이러한 지배가문의 공권을 배타적으로 집중시킨 황제의 지위와 관련되는 것을 지칭하게 되었는데 오구라 요시히코(小倉芳彦)의 말을 인용하면 전국(戰國)·진한(秦漢) 이후의 시기에 이르게 되면 국가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통일천하의 상징인 황제 즉 천자나 또는 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관료

32) 尾形勇, 1979, 『中國古代의 ‘家’와 國家: 皇帝支配下の秩序構造』, 東京: 岩波書店, 242~243쪽. 중국사 전통에서의 천하 관념의 다양한 의미와 역사적 변화에 관해서는 金翰奎, 1982, 『古代中國의 世界秩序研究』, 일조각, 10~108쪽 참조.

33) 尾形勇, 1979, 앞의 책, 247쪽.

34) 金都鍊 역주, 1990, 『朱註今釋 論語』, 현음사, 506~507쪽.

35) 尾形勇, 1979, 앞의 책, 261~262쪽.

36) 小倉芳彦, 1969, 「補論·國家と民族」, 『講座·現代中國』 II, 東京: 大修觀書店; 尾形勇, 1979, 앞의 책, 264쪽에서 인용.

적 관리(管理) 기구를 뜻했다고 한다.³⁷⁾

2) 일본

일본에서 國이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 것은 『일본서기(日本書紀)』로 알려져 있고, 국가(國家)라는 말은, 7세기 초 추고(推古) 천황의 아들인 성덕(德) 태자가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일본 최초의 성문법인 『17헌법』에서 처음 사용되었다고 전해진다.³⁸⁾ 이 두 개의 말은 모두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통치조직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굳이 의미상의 차이를 말하자면, 사이토 도시유키(齊藤俊明)는, 國은 토지의 쪽에, 국가(國家)는 통치조직 쪽에 더 중점이 가 있는 정도라고 한다. 8세기 초의 『고사기(古事記)』에는 그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邦, 國, 邦家 등의 표현이 보인다. 그러나 어느 쪽도 국민, 영토 및 통치권의 세 가지 요소를 갖춘 근대적 의미의 state에 대응되는 개념으로는 볼 수 없다.

한편 천황의 지배력이 미치는 영역 전체를 지칭하는 天下라는 말이 국가와 함께 사용되었다. 이 천하(天下)라는 단어는 5세기 말에서 6세기 전반부로 추정되는 고분 철검에 새겨진 문구에서 처음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중국에서의 천하 개념이 전해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사용은 중국으로부터 독립된 자신의 정치적 존재를 지칭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고대 일본에서는 천자가 다스리는 일본 열도를 세계 전체로 보았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이후에는 일본에 있어서의 정치지배의 보편성을 보이기 위

한 용어로 되었다고 한다. 가마쿠라(鎌倉) 막부 이래 군사정권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천하주인(天下主人)으로 부르기도 했는데, 이러한 호칭은 자신들의 지배 체제의 보편성을 알리기 위해 선택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³⁹⁾

이렇게 보편적인 공권력을 상징하는 천하의 개념은 중세 이후에는 무가(武家)의 정권 장악과 관련하여 무가 정권의 정당화를 위한 문구로 사용되었다. 즉 무가의 정권 장악은 ‘천하초창(天下草創)’으로 합리화되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천하의 단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였고, 그의 뒤를 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와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는 자신들을 천하인(天下人)으로 내세웠다. 이 천하는 방역 또는 영역 전체를 지칭하는 말로 오늘날의 용어로는 국가가 된다. 이 당시 보편성의 상징으로서 영역 전체를 지칭하기 위해서 국가라는 단어는 별로 사용되지 않았고, 대신 國은 지방의 지배자인 다이묘(大名)의 관할 지역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때 國이라는 단어의 선택은 현실적 지방 실력자로서의 다이묘를 공권력의 체계 속에서 인정되는 공적 권위로서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이루어진 일로 여겨진다.⁴⁰⁾

에도(江戸) 막부 말까지 국가라는 말 대신에 천하가 일본 전체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서양어의 state가 들어오면서 번역어로 선택된 말은 국가인데, 이것은 중국에서 진한(秦漢) 이후의 시기 전체에 걸쳐 천자 혹은 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관료적 관리기구로 이해한 중국 고전 문헌에 익숙했던 메이지 초기의 지식인들 덕분이었다고 지적된다.⁴¹⁾ 특히 메이지 유신을 통해 천황 중심의 새로운 정치조직을 수립했던 이들 지식인들의 관점에

37) 『逆流と順流:わたしの中國文化論』, 1978, 研文出版, 45~46쪽. 이시다 다케시(2003), 『일본의 사회과학』, 한영혜 역, 도서출판 소화, 35쪽에서 인용.

38) 石塚正英・柴田隆行 監修, 『哲學・思想翻譯語事典』, 2003, 國・國家 항목(齊藤俊明), 論創社, 80쪽. 이시다 다케시(2003), 앞의 책, 34쪽.

39) Asao Naohiro(朝尾直弘)(1991), “The Sixteenth Century Unification,” in Hall, John W. et al.(eds.), *The Cambridge History of Japan*, vol. 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80.

40) Asao Naohiro(1991), 앞의 책, p. 83. 일본에 있어서 國 또는 國家는 지속적으로 천황 지배의 전승과 관련되어 있었다고 지적된다. 이시다 다케시(2003), 앞의 책, 35~36쪽.

41) 이시다 다케시(2003), 앞의 책, 35쪽.

서 볼 때 새로운 정치조직은 서양의 the state의 확립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이것의 이름은 천하보다 관리조직을 지칭하는 국가를 더 적절하게 여겼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다만 일본의 경우, 국가는 단순한 통치기구를 넘어서서 ‘만세일계의 천황지배’와도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⁴²⁾

4. 한국사 전통에서의 국가의 개념

1) 고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서책의 형식으로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 기록인 『삼국사기(三國史記)』의 경우 國이라는 표현은 이미 책의 제목에서부터 나타나고 있고, 본문에서는 무수히 많지만 國家라는 표현은 40여 회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굳이 國과는 특별히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국가라는 표현이 처음 사용되는 바사이사금(婆沙尼師今) 8년 7월조에 보면 “짐이 부덕한 사람으로 나라를 다스리어…”(朕以不德有此國家)라는 구절이 보인다. 또한 지증마립간(立干) 4년 10월조에는 “자고로 국가를 가진 이가 다 제왕으로 칭했는데…”(自古有國家者 皆稱帝稱王)라는 표현도 우리에게 전혀 낯설지 않다.

『삼국사기』에서의 國家라는 말의 사용법은 『삼국유사(三國遺事)』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고, 일부 구절은 삼국사기에서 따온 느낌을 주는 것도 있다.⁴³⁾

42) 이시다 다케시(2003), 앞의 책, 35~36쪽.

43) 예컨대 바로 앞에서 인용된 경순왕의 한탄은 『삼국유사』 제2권 金傳大王(敬順王) 편에서도 그대로 반복되어 나타난다.

여하튼 『삼국유사』의 원문을 검색할 때 國家의 표기는 총 11회 나타나는데, 대부분 『삼국사기』와 그 용법이 같음을 알 수 있다. 제1권 「태종춘추공(太宗春秋公)」조에서 처음 나타나는 국가는 다음과 같이 사용되고 있다. “생각건대 우리나라는 점점 성하고 신라는 점점 약해진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意者國家盛而新羅寢微乎).

2) 조선조의 기록물

이 글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바로 특정 시대의 특정 사회 안에서 합의되고 있는 언어 개념이다. 따라서 우리는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특히 실록에서 보이는 국가 개념의 사용례를 통해 그 시대의 특정한 정치적 사유의 모습과 또한 있을 수 있는 변화의 모습을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식 기록에서의 용례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가 선택한 또 다른 문헌은 조선조 전체에 걸쳐 최고의 정치담론을 제공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다산(茶山)의 『경세유표(經世遺表)』와 반계(磻溪)의 『반계수록(磻溪隨錄)』에서의 국가 개념의 사용례를 검토했다.

(1)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태조에서 순종 부록까지)에서의 國家의 사용례는 총 16974회가 된다.⁴⁴⁾ 이것들 가운데 필자는 태조(太祖), 태종(太宗), 세종(世宗) 그리고 순조(祖) 실록만을 검토했다. 건국 초 실록을 검토한 결과 국가의 용례에

44) 이 횟수는 현재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朝鮮王朝實錄』(<http://sillok.history.go.kr>)의 검색을 이용한 결과이다. 우리말 번역 텍스트에서 ‘국가’ 항목은 총 20103회로 나오는데, 이것은 원문이 國家가 아닌데, 번역 결과로 국가가 된 것이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社稷, 邦家, 邦國 등이 그것들이다. 國家가 아닌 國의 경우는 훨씬 많은데, 이것을 국가로 번역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거의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아 중간대의 실록의 검토는 생략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제일 자주 나오고 왕조 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나타나는 국가의 사용례는 주어진 정치공동체의 안전 문제와 관련되어 나타난다. 국가안위(國家安危), 국가지흥쇠(國家之興衰), 국가지변(國家之變), 국가미령(國家未寧), 국가승평(國家昇平), 국가위망(國家危亡), 국가간위(國家艱危), 국가휴척(國家) 등의 구절들이 전부 그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실제 이러한 경우의 국가라는 말은 순수한 우리말의 나라에 해당되는 것으로 앞에서 본 서양어의 republic/state의 두 가지 가운데 republic(또는 commonwealth)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는 단순히 전체 공동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다스리는 주체가 된다. 즉, 필요할 경우 백성이나 그 관리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중앙정부(의 권위)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특성의 행동 주체로서의 국가 즉 정부의 일은 실로 다양하다. 예컨대 병사의 훈련도 시키고(태종 2년 2월 5일) 백성으로부터 세금을 걷거나 백성이 어려울 때 구휼 활동을 벌이기도 한다(태종 7년, 1407, 6월 28일; 12년 7월 25일). 한편 국가는 다스리고 명령하는 주체로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동시에 다스리고 소유하고 상실되는 객체로서도 이해된다.

왕실 또는 왕가와 국가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는 논의는 대단히 드문 데 비해 정반대로 왕가와 국가를 구별해야 한다는 논의도 한때 대단히 강하게 토론된 적이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토론은 태종조 때 양녕의 폐세자 및 총령에 대한 선위 문제를 둘러싸고 심각한 양태로 벌어졌다.⁴⁵⁾ 구체적인 예로 우리는 세종 2년 8월 11일의 기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양녕대

45) 이 당시의 토론 과정에 대해서는 이한수, 2002, 「조선 초기 '家'와 '國家'에 관한 논쟁: 양녕대군 폐세자와 세종의 즉위 과정을 중심으로」, 『역사와 사회』 제28집, 1~38쪽 참조.

군의 산릉 제사 참여의 문제를 둘러싼 토론 과정에서 상왕으로 물러나 있던 태종은 “이것이 비록 한 집안의 일이라 하여도 또한 국가에 관계되는 것이니 그것을 대신들과 조용히 의논하여 계(啓)하도록 하라”(此雖一家事, 亦係國家, 其與大臣密議以啓)고 말하는 대목에서 왕가와 구별되는 국가의 관념을 읽을 수 있다.

(2) 『반계수록』과 『경세유표』

『반계수록』에서 국가라는 단어가 사용된 횟수는 40회를 약간 상회하고 있고, 『경세유표』의 경우 55회를 약간 넘는다. 이 두 책에서 사용되는 국가라는 말은 거의 같은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반계수록』을 검토할 때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이 국가의 재정, 비용, 수요 등에 관한 재정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이외에 국가의 안전 및 방위의 문제가 다루어지는가 하면 국가의 임무, 사업, 이익 등이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국가의 운영에 관한 문제가 국가의 통치라는 이름으로 논의되고 있고, 때로는 국가의 체면, 폐단, 태평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국가라는 용어의 사용방식은 우리가 앞서 검토한 『삼국사기』, 『삼국유사』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에서 볼 수 있었던 국가라는 단어의 사용방식과 사실상 동일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경세유표』에서 보이는 국가라는 단어의 사용례도 『반계수록』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역시 공동체 전체로서의 국가이다. 즉, 그는 우선 ‘국가의 흥망’에 제일 큰 관심을 쏟았다. 그러한 각도에서 그가 특히 걱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재정’, ‘국가의 경비’, ‘국가의 경리’, ‘국가의 수입’ 또는 ‘국가의 세입’이다. 즉,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국가의 근본’ 또는 ‘국가의 질서’가 허물어지게 된다. 이것은 곧 ‘국가의 법제’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할 경우 ‘국가의 체면’이 훼손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이 곧 ‘국가를 다스리는’ 일 또는

‘국가 운영’의 핵심이 되는 일들이다. 이러한 문제 외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있으니, 그것은 ‘국가의 보호’와 ‘국가의 방수(防守)’를 위해 국가의 울타리(藩衛)가 되는 경비망을 제대로 살피는 것이다.

5. 새로운 국가 개념의 시작

1) 유길준: 개국과 국가에 관한 성찰의 시작

이러한 국가 개념의 안정성은 개항과 더불어 출현한 서양 제국, 또는 그것을 본뜬 일본의 문물/제도의 소개와 아울러 전통 질서의 지속 가능성이 시험에 부쳐짐으로써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생존을 위한 대응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국가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 대한 전혀 새로운 인식, 즉 새로운 국제질서관과 윤리/도덕적 사고에서 전략적 부국강병관으로의 인식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객관적 여건이 주어지게 되었다.

우리의 주제와 관련하여 특히 지적되어야 할 점은 국가의 개념을 통해 이해되던 정치조직의 종류(政體)가 더 이상 하나만이 아니라는 점에 눈을 계 되었다는 사실이다. 19세기 말 이전까지 국가 관념이 상당한 안정성을 누렸다는 말은 기존 정치권력 체제에 대한 현실적인 위협이 별로 크지 않았다는 말을 의미한다. 즉, 기성 체제의 변화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나름대로 효과적으로 기능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치로는 물론 내부적으로 기성 체제를 옹호하는 효과적인 정당화 이론, 내부로부터의 전복을 막거나 퇴치할 수 있는 지배 집단의 내부적 단합력이나 국가가 보유하는 실질적 무력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대자소(事大小)의 관념을 바탕으로 하는 중국과의 관계를 들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

해, ‘중국적 세계 질서’가 제공하는 안정성, 즉 유사시의 변란을 막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중국의 무력적 보장이 기성 정치 질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최상위 심급의 보루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하튼 19세기 말 중국적 중화 질서의 동요는 조선에게 새로운 정치적 기회를 제공했고, 이러한 변화된 상황은 서양식 주권 국가로서의 자기 인식을 낳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인식이 처음 분명한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 문서를 들자면 유길준의 『서유견문』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 보이는 유길준의 관심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우리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은 지금까지 청국의 조공국이었던 조선의 지위를 여하히 근대 국제 질서 속의 주권 국가로서 설정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이와 관련하여 유길준이 제시한 논의는 ‘양절체제(兩截體制)’라는 말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비록 조선이 전통적으로 청국에 조공을 바쳐 왔지만 속국은 아니었고, 따라서 이러한 조공국의 지위와 서양식 국제질서에서의 주권 독립국의 지위는 양립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양립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지키기 위해 조선은 개화와 부강을 획득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그 방안의 하나는 군민공치의 국내 체제를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제시한다. 이것은 다른 정체라는 대안의 개념을 갖지 않았던 정치담론의 전통을 고려할 때 새로운 발걸음의 의미를 지니는 논의로 볼 수 있다.

유길준은 조선 국가의 개화와 부강을 말하지만, 이때의 국가 개념은 전통의 국가 개념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어 새로운 국가 개념의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다. 그도 이러한 문제점을 의식했는지 뒤에 일본에서 사용되던 서양 이론에 입각한 국가론을 번안하여 『정치학』이라는 이름으로 발간한 바 있다.

영국에서의 개념사 작업의 중심적 학자의 한 사람인 켄틴 스키너(Quentin

Skinner) 교수는 개념사 연구의 의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명한 바 있다. 즉, 한 사회가 분명히 의식하면서 정치/사회 문제에 관련한 어떤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의 가장 중요한 징표는 그 개념을 명료한 형태로 토론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어휘가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의미로 이해할 때 16세기 말에 이르면 적어도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근대적 국가에 관한 새로운 개념을 갖게 되었다고 그는 말한다.⁴⁶⁾ 이를 빌려 말한다면 유길준에 의해 국가라고 번역된 서양어의 state/Staat의 개념을 중심으로 짜여진 이론서 또는 교과서가 소개되었지만, 이것이 (서양식) 국가에 대한 새로운 경험이나 충격의 설명을 위해 사회적으로 진행된 토론의 과정에서 만들어지기 보다는 새로운 제도와 관념의 소개를 위하여 서양에서 만들어진 기성의 제품을 소개하는 작업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스키너적 의미에서 당시 조선 사회가 국가라는 단어는 이미 갖고 있었지만, 서양식 근대 국가에 관련한 새로운 개념을 갖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새로운 현상에 관한 설명과 토론을 위해 국가의 단어와 관념이 소개되었으나, 그것의 이해는 여전히 경험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전통적 사고틀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2) 국권 상실과 국가사상의 제고

『독립신문』은 1896년 정치와 사회 등에 관련된 공론의 형성과 전달을 위한 한국사 최초의 대중매체로 출발했다. 이 신문에서 빈도 있게 다루어진 기사는 국가를 위시하여 독립, 신민, 교육, 인종, 국민, 황상, 권리, 백성, 인민 등의 주제어에 관한 것들로 공론의 매체로서는 당시 기대되는 다양한 시사

46) Skinner, Quentin(1978), 앞의 책, vol. I, p. x.

적인 문제에 관해 보도와 논평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국가에 관해서 볼 때 다른 주제에 비해 특별히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독립신문』에서는 국가 그 자체를 심도 있는 논의의 주제로 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신문의 제명으로 되어 있는 ‘독립’이라는 말은 일단 새로운 신문의 제명으로 했던 만큼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큰 관심을 가졌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물론 이때의 독립은 당연히 국가의 독립이지만 여기에서 국가는 당연한 것으로, 즉 그 자체로서 굳이 더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특별히 심도 있는 논의를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위에서 언급했던 단어들 전부가 국가에 관한 『독립신문』 집필자들의 국가에 관한 생각을 엿보게 할 수 있는 ‘국가’와 관련된 중요한 주제어들로 생각된다.

국가라는 말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취급했다는 사실은 당시 사회에서 이미 함의된 의미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관련되는 주제들에 대해 논의를 했다는 점을 의미한다. 『독립신문』에서 사용되는 국가의 용례를 조사한 한 연구에 따르면 “‘국가’의 용례는 주어진 정치체를 서술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그것이 담고 있는 정치사회적 함의를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 상세히 밝힌 경우는 거의 없다”⁴⁷⁾고 한 지적은 바로 그러한 점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국가의 문제가 갑자기 높은 빈도로 토론되기 시작한 것은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고 국권 상실이 급박한 문제로 제기되면서부터였다. 이와

47) 김동택, 2004, 『독립신문』의 근대국가 건설론, 『社會科學研究』 12-2, 92쪽. 국가에 관한 전통적 개념을 그대로 계승한다는 점, 즉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원론적인 재검토가 따르지 않았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독립신문』의 주역들이 가졌던 사상에 대해 ‘자연법적 천부인권설’, 대중적 기반 위에 선 자유민권운동, 또는 ‘국민적 통일이라는 내셔널리즘의 과제를 달성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는 긍정적 평가(김영작, 2006, 『한말 내셔널리즘: 사상과 현실』, 백산서당, 389~390쪽)는 실제보다 상당히 과장된 평가라는 인상을 준다.

함께 많은 새로운 간행물들이 발간되기 시작했고, 이들을 통해 강도 높은 토론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잡지들에는 『대한유학생회학회보(大韓留學生會學報)』, 『대한자강회월보(大韓自強會月報)』, 『대한협회회보(大韓協會會報)』, 『서우(西友)』, 『서북학회월보(西北學會月報)』, 『기호흥학회월보(畿湖興學會月報)』, 『대조선독립협회회보(大朝鮮獨立協會會報)』, 『태극학보(太極學報)』, 『호남학보(湖南學報)』, 『대한학회월보(大韓學會月報)』, 『대한흥학보(大韓興學報)』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토론을 위한 잡지들의 발간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서양 문물의 이해를 돕는다는 의미의 교과서 형태의 서적들도 많이 발간되었다. 특히 국권 상실을 계기로 국가사상을 고취시킨다는 실천적 필요성에 따라 ‘국가’라는 단어를 전면에 내세운 ‘국가학’이라는 제목의 저작이 나오기 시작했다. 국권 회복에 대비하여 국가에 관해 이론적으로 무장해야 할 필요성이 절박하게 인식되었다. 그리고 국권 상실이 국민들의 부족한 국가의식, 민족정신 또는 민족사상에도 그 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았던 당시의 논객들은 이러한 것을 극복하고 국가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양 정치학의 수학을 통해 국가 또는 정치 현실을 바르게 알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 복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논지를 전개하기도 했다.⁴⁸⁾

‘국가학’이라는 제명으로 한국에서 발간된 첫 번째의 책은 1906년 나진(羅璿)과 김상연(金祥演)이 역술(譯述)한 『국가학(國家學)』이었다.⁴⁹⁾ 이 책의 원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이 책에 인용되어 있는 독일의 국가학자 블

룬칠리가 자주 인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독일학자의 책을 일본어로 번역한 것을 다시 중역한 것으로 보인다.⁵⁰⁾

천도교에서 발간한 『만세보(萬歲報)』는 1906년 9월 19일부터 11월 22일까지 「국가학」이라는 제명의 연재물을 게재했다.⁵¹⁾ 국한문으로 된 다른 기사와는 달리 순한문으로 된 이 연재물은 상당히 제한된 독자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추측된다. 출전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아마도 독일의 국가학 계통의 저술임을 짐작케 한다.

이외에도 당시 폐지된 과거에 대신하는 국가고시 준비용의 헌법학과 법학 통론 등이 일본 원서를 바탕으로 강술하는 형식으로 여러 권 발간되었는데, 여기에서 다루어지는 국가의 부분은 전부 독일 국법학 또는 국가학의 전통이 짙은 것으로 평가된다.⁵²⁾ 독일 국법학자로 특히 일본에서 널리 소개된 블룬칠리의 국권유기체설의 영향이 짙게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점은 블룬칠리의 *Allgemeines Statsrecht*(1851)를 부분 번역한 양계초(梁啓超)의 책을 국한 혼용으로 번역한 책이 두 종류나 발간되었던 점에서 잘 나타난다.

이러한 유기체설이 양계초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중국이 서양의 제국주의적 침탈 행위에 굴복했던 한 원인이 중국인들의 부족한 국가사상이고, 이것의 극복을 위해서는 유기적 통일체로서의 국가의 사상을 빨리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양계초의 믿음과 관련된다. 즉, 국가는 개인들의 기계

48) 김도형, 1994, 『大韓帝國期의 政治思想研究』, 지식산업사, 97쪽.

49) 이 책은 현재 1906년의 원서가 영인본으로 재간되어 있다. 나진·김상연 譯述, 1986, 『國家學』, 부산: 민족문화. 이 영인본 말미에는 이 책의 역술자인 나진과 김상연 두 사람의 간단한 이력과 함께 이 책의 발간과 관련된 전후 사정에 관해 동아대학교 김효전 교수가 유용하고 상세한 해설을 붙이고 있다.

50) 나진·김상연, 1986, 앞의 책, 3쪽.

51) 이 연재물은 동아대학교의 김효전 교수가 약간의 주석과 함께 우리말로 번역하여 『동아법학』 7호, 1988, 229~380쪽에 발표했다가 다시 뒤에 단행본으로 발간했다(도서출판 관악사, 2003). 이 책의 뒤에는 아래에서 논의될 安鍾和, 『國家學綱領』과 鄭寅琥, 『國家思想學』 두 책의 영인본이 실려 있다.

52) 이와 관련된 국내 문헌들에 관해서는 김효전, 1996, 『서양 헌법 이론의 초기 수용』, 철학과현실사, 제6장에 자세히 소개되고 있다.

적인 결합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적 통일체라는 교훈을 빨리 배워야 하는데, 블룬칠리에게서 그러한 교훈이 잘 담겨져 있다고 양계초는 믿었다.

당시에는 블룬칠리의 책과 양계초의 저술을 통해 이미 자연법적 국가 이론과 유기체 국가 이론이 상세히 소개되고 있었다.⁵³⁾ 국권보다 민권을 더 중요하게 다룬 사람도 있었으나⁵⁴⁾ 일반적인 분위기는 유기체설이 선호되었다. 정치 논설이 주어진 현실문제의 답을 얻기 위해 저술되기 때문에 당면한 과제, 즉 국권이 위태롭게 여겨지던 상황 하에서 개인의 권리 주장에 앞서 국가의 단합을 강조하는 글이 거의 일방적일 정도로 많았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런 일로 여겨진다.

국가유기체설이 중국의 경우에는 양계초를 통해 반식민지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적 통일을 위한 이데올로기로 활용되었음은 앞에서 이미 지적되었지만, 1905년 을사보호조약 이후 한국 지식인들에게 국가유기체설이 특별한 매력 또는 효용 가치를 갖게 된 것도 전적으로 양계초와 동일한 문제의식에서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러한 유기체설이 큰 저항 없이 수용된 것도 일본의 경우와 같이 기존의 국가관 또는 사회관과 친화되는 부분이 컸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개인을 원자적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가족의 부분으로 파악하는 전통 사상을 말하는 것이다.

53) 예컨대 薛泰熙는 『대한협회회보』(1908) 3권과 5권에서 「憲法」이라는 글을 통해 이 두 개의 이론을 자세하게 비교하여 논의하고 있다.

54) 앞의 설태희가 그러했고, 1907년에 『법학통론』(1908, 東書館)을 발간한 朱定均도 유기체설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피력한 바 있다. 관련된 문장에 관해서는 김효진, 2000, 앞의 책, 153~154쪽 참조. 이 외에도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개인의 우선적 입장에서 논의한 글들이 다수 발견된다. 예컨대 김영기, 김지간 또는 문일평 같은 사람들을 들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박찬승, 2002, 「20세기 韓國 國家主義의 起源」, 『韓國史研究』 117, 204~205쪽 참조.

3) 장지연과 사회진화론

장지연이 볼 때 국권의 상실을 결과하게 만든 가장 큰 문제점은 당시 조선인들의 단결력 부족이었다. 그는 일단 국권이 상실된 상황에서 시급한 문제는 현실적으로 부재한 국가를 대신하여 한국인의 정신적 단결을 구현할 수 있는 물리적 실체의 창출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단합의 작업과 관련하여 한국인들은 다섯 개의 병폐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당파, 기질(忌嫉), 의뢰, 나태 및 국가사상의 부재(無國家之思想)라고 그는 지적한다.⁵⁵⁾

장지연에 있어서 국가는 “민족이라는 단체가 집합하는 데에서만 성립되는 것”이라고 본다.⁵⁶⁾ 생존 경쟁에 관한 사회진화론의 영향 덕분에 장지연의 국제정치관은 대단히 현실주의적인 색채를 보이지만 국가에 관해서는 ‘민족이라는 단체의 집합’이라는 규정을 넘어서는 다른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눈여겨볼 점이 있다면 그것은 국가의 정의가 민족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이론적으로 국가와 민족은 별개의 실체로 규정될 수 있지만, 장지연에게 민족 없이는 국가가 설명될 수 없고 국가는 민족 없이는 허망한 것처럼 여겨지게 된다. 물론 이러한 사실이 서양에서 발전된 ‘the nation-state’를 지적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족국가’가 아닌 국가는 당시의 현실정치를 논의하는 현장에서는 부차적 의미 이상의 것을 가질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당시의 관점에서 볼 때 국가의 문제는 오로지 민족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성을 갖는 것이었다.

55) 장지연, 1906, 「團體然後民族可保」, 『大韓自強會月報』 5. 『張志淵全書』, 1979~1989,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8권.

56) “夫國家之所成立者是由乎其民族之團體集合耳.”(장지연, 1906. 7, 앞의 논설, 『全書』 8, 473쪽).

4) 단재 신채호

1905년에서 1910년까지 일본의 국권 침탈이 거의 목전에 다가오면서 국가의 틀이 갖는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절박한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그러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 국민의 단합에 대한 호소도 더욱 절실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주장을 설득력 있는 논의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론적 자원으로는 국가를 가족에 비유하고, 따라서 나라 사랑을 가족에 대한 사랑에 비유하는 전통적 사유가 가장 일반적이었다. 그리고 서양 이론으로서 이러한 전통적 사유와 가장 친화력이 컸던 국가유기체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국가유기체설이, 그것이 원래 만들어졌던 고장에서의 정치적 의미와 무관하게 동아시아에서 적극적으로 수용된 것은 그것이 개체로서의 국민 또는 국가의 의식을 강조하고, 따라서 이러한 의식을 상대적으로 결여하고 있던 아시아 국가에서 단합된 국민의식의 고양을 도와주는 이데올로기로서의 효용성 덕분이었다.

중국의 양계초가 국가유기체설을 바탕으로 하는 블룬칠리의 이론을 적극 받아들인 것도 그 때문이었고, 바로 같은 이유에서 한국 내에서도 많은 추종자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점은 앞에서 이미 지적되었다.

이러한 입장에서 국가의 중요성을 호소한 논객들 가운데 국가의 중요성을 명시적으로 근대 민족주의의 사상적 흐름과 연결시켜 논의한 가장 중요한 인물로는 단재(丹齋) 신채호(申采浩)를 든다. 그는 우선 국가를 이해함에 있어 국가와 가족을 동일시하는 전통적인 국가 관념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신채호는 이러한 전통적 유교 관념에서 머물지 않고 근대적 국가 관념으로 발전해 갔다. 실제 그가 가족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목적은 가족 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애호의 감정을 국가라는 대가족으로 확

대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⁵⁷⁾ 확대된 가족으로서의 국가 관념의 형성은 그가 역시 양계초를 통하여 수용한 사회진화론의 관념을 바탕으로 설명된다.⁵⁸⁾

신채호가 국가를 ‘민족정신으로 구성된 유기체’⁵⁹⁾라고 할 때는 전체 인민이 참여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가는 역사적 진화의 결과로 만들어진 최후의 양상으로 풀이된다. 그에 따르면 “국가 명칭의 출생은 고대에 在하나 고대의 국가는 일가족의 有한 바이며, 금대의 국가는 일민족의 有한 바”이다.⁶⁰⁾

‘민족정신으로 구성된 유기체’로 정의되는 국가의 관념은 처음부터 그러했던 것은 아니고 진화의 결과로 이해되는데, 중요한 점은 그 진화를 가능케 한 메커니즘이 경쟁이라는 사실이다. 이 경쟁을 통해서만 국가의 성원들은 자신들이 속해 있는 국가라는 개체의 존재를 의식할 수 있는 것으로 신채호는 말하고 있다. “한국이 수백 년 내로 대외의 경쟁이 무하므로 국가적 관념이 甚微하여...”⁶¹⁾

이러한 신채호의 국가 관념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 요소가 되는 것은 바로 ‘민족’의 개념이다. 즉, 민족의 요소를 빼다면 국가의 개념은 홀로는 존재할 수 없게 된다. 그가 민족의 개념을 앞에 내세우게 된 것은 당연히 당대의 정치문제, 즉 국권 회복의 절박성에서 연유한다. 당시의 많은 지식인들이 공감한 가장 큰 문제는 당시의 사람들이 강력한 국가 관념을 갖지 않고 있었다는

57) 그의 「打破 家族的 觀念」이라는 글 참조. 『신채호전집』 별집, 164~66쪽.

58) 신채호에 대한 사회진화론의 영향에 관해서는 이광민, 1979, 「구한말 사회진화론의 수용과 그 영향」, 『한국개화사상연구』, 일조각; 신용하, 1984, 『신채호의 사회사상 연구』, 한길사; 신일철, 1983, 『신채호의 역사상 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전복희, 1996, 앞의 책 등 참조.

59) 신채호, 1975, 「독사신론」, 『신채호전집』 상, 형성출판사, 471쪽.

60) 신채호, 1975, 「身·家·國 三觀念의 變遷」, 『신채호전집』 별집, 156쪽.

61) 신채호, 1975, 「국가는 즉 일가족」, 『신채호전집』 별집, 148쪽.

사실이였다.

국가 개념의 회복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국가가 민족정신으로 구성된 유기체'⁶²⁾라는 사실을 빨리 인식해야 함을 그는 강조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러한 정신의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민족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신채호에게 민족이 없는 국가는 있을 수 없다. 이러한 논의는 앞서 토머스 홉스에서 보이는 추상화된 정치권위의 탄생을 설명하려는 국가론이 아니라 기왕에 형성되어 온 '민족'이라는 객관적 집단에 정치적 외피를 제공하고자 하는 독일 국가학에서의 국가 개념과 상당히 유사한 형태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신채호 이후의 국가 문제에 관련된 토론은 일제 강점기의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때 제시된 논의는 민족과의 연결 속에서 승배의 대상으로 고양된 국가 개념을 드러낸다. 이러한 논의들은 그 진정성도 의심스럽고, 또한 일본의 공식 국가 이데올로기의 반복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국가 개념사의 맥락에서 정식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광복 이후의 국가 개념은 서양식 자유민주주의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전체주의 국가관이 분단 정치권력의 조직을 위한 공식 이데올로기로서 해외에서 수입된다. 이때의 특징은 모두가 국가의, 또는 독점 정당의 특수한 정치적 역할에 대한 강조라는 점, 따라서 국가지상주의의 방향으로 유도되었다는 점에서 발견된다. 이에 대한 개념사적 평가는 그 자체가 큰일이기 때문에 일단 광복 이전, 보다 엄밀하게는 1910년까지의 시기까지를 다루고자 하는 이 글은 따라서 신채호에서 마친다.

62) 신채호, 1975, 『독사신문』, 『신채호전집』 상, 471쪽.

6. 결론: 요약과 토론

우리는 앞에서 서양 전통에서의 국가 개념의 역사와 함께 동아시아 전통에서의 국가 개념을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한국사에서의 국가 개념의 역사도 살 보았다. '근대화' 과정을 통해 동아시아의 상당히 많은 서양식 사회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에 따라 새로운 이름들이 만들어졌다. 그 대표적인 경우로 우리는 사회, 주권, 권리, 개인 등의 개념을 들 수 있다.

국가의 경우도 현재는 서양식 국가 개념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서양에 비해 오히려 더 긴 국가 전통을 갖고 있는 동아시아에서의 국가 개념의 이해는 서양의 경우와 같이 일직선적인 변화 과정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다. 고유한 전통을 바탕으로 하면서 그것과 친화성이 있는 서양적 개념을 받아들여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설정하고 답을 찾는 작업에 임했다.

서양적 개념이 소개되기 이전의 동아시아, 특히 한국의 전통적 국가의 개념은 상당한 안정성을 누리고 있었다. 그 첫 번째 요인으로 우리는 국가라는 틀 자체에 대하여 굳이 새로운 설명을 할 이유가 없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기존 질서가 아무런 도전도 받지 않은 채 모든 것이 타당하게 받아들여 지던 환경 속에서 새로운 논의는 불필요한 것이었다. 두 번째로 경험과 이론 두 가지 면에서 기존 체제에 대한 아무런 대안이 없었다는 점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기존 체제의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대안적 세력의 성장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다시 사회경제 체제의 확대나 성장이 없었다는 점을 말한다. 따라서 새로운 국가의 틀이 논의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음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런데 서양의 국가 개념의 전통도 하나의 것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복잡하고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다. 우리는 앞서 근대 서양에서 발전한 국가 개

념을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했다. 하나는 홉스로 대표될 수 있는 사회계약설 개념이다. 이에 대해 후일에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가했지만 사실 홉스의 이론이 갖는 진정한 의미는 당시까지의 기독교적 국가 이론이 붕괴된 상황에서 새로운 국가권위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강력한 이론적 시도였다. 맥락을 무시하면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홉스의 경우는 정체와, 또한 공동체와 무관하게 정치권위가 존재해야 할 이유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었다.

그러나 후일 시민혁명이 성공한 후 국가를 그 구성원, '국민(nation)'이라는 집합적 이름을 갖게 된 시민들의 필요에 복무하는 조직으로 재규정하는 작업이 시도되었다. 이러한 구성원 사이의 유기적 연결성을 바탕으로 국가를 정의하는 작업은 개체로서 규정되는 인적 집단(Volk)의 존재는 확인되었지만, 그에 상응하는 국가라는 정치조직을 갖지 못했던 독일에서 보다 강력하게 시도되었고, 이것은 뒤에 국법학, 국가학 등의 학술적 이론화의 틀로 나타났다. 동아시아에 전달된 이러한 국가 개념의 전통은 국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데올로기로서의 유용성 때문에, 그리고 그 이론이 갖는 동아시아 전통적 국가 개념과의 친화성 때문에 대단히 쉽게 수용되었다.

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 민족주의 색채를 강력하게 드러내는 민족국가사상이었다. 한국사의 경우 장지연이나 신채호 등에서 나타나는 강력한 민족주의는 모두 서양에서의 진화론과 국가유기체설의 영향을 받고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민족주의적 국가 이론이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이론으로 기능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일단 조직된 국가 권력에 의해 사용될 경우에는 국가조직의 권력 사용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위험한 경향이 보인다. 이러한 점은 일본의 메이지 헌법 체제에서 드러났고, 또한 해방 이후 한국에서의 국가 권력 주도의 권위주의적 민족주의운동 또는 국가지상주의에서 드러난 바 있다.

흥미로운 일은 식민지 지배 하에서 만들어진 민족주의적 국가 이론은 식민통치가 사라지면서 국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가지상주의가 성장하고, 다시 이것은 권위주의 정치를 옹호하는 이론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이다.⁶³⁾ 이러한 국가지상주의와 민족주의를 명분으로 하는 권위주의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에 대처하는 이론적 준비가 없었던 상황에서 또 다른 이론적 자원을 수입했어야 하는 것이 1950년대 이후의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이론적 자원은 국가를 부인하거나 비판적으로 규정하는 자유주의 정치 이론, 예컨대 영국의 다원주의 또는 미국의 다원주의 이론을 통해서 그 수용이 이루어졌다.

서양 국가들의 형성 과정과 함께 그 국가들이 발전시킨 독특한 국가 개념을 검토할 때 어떤 그 독특한 국가 개념 또는 국가 이론은 자신들이 처한 정치적 문제와 관련하여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작업에 필요한 이론적 자원이 국내에서만 조달된 것은 아니었다. 유럽의 경우 그러한 이론적 자원이 유럽 전체 국가들이 공유한 전통에서 주어졌다.

이러한 점을 한국의 전통에 비추어 검토할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중국으로부터의 영향 이외에는 일체의 외래 사조나 이론의 유입을 막았기 때문에 대안 구상을 위한 자유로운 사고의 장이 마련되어 있지 못했다. 더욱이 정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일체의 비판적 사고를 억제하는 지적 환경 탓으로 변화하는 정치 상황에 합당한 독자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지적 능력의 개발이 가능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일단 외래 사조가 유입되었을 때 이것들을 독자적으

63) 광복 직후 남한에서의 민족지상주의와 국가지상주의 운동에 대해서는 박찬승, 2002, 앞의 논문, 231~242쪽 참조.

로 소화해서 자신에게 맞게 재단할 수 있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충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외래 이론의 수입이 필요했다. 그 결과 자신의 문제를 독자적으로 개념화하는 능력은 계속 개발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수입된 사조나 이론의 적용에 있어서는 원래의 사조나 이론이 갖고 있는 폭과 깊이를 측정할 수 없어 항상 유연성이 결여된 협소하고 원리주의적인 사고가 더 지배적이 되었다.

국가 개념의 올바른 설정은 사회변화를 위한 효과적 힘의 조직과 조직된 힘의 올바른 사용과 견제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자신의 사회가 처해 있는 대단히 특수한 상황에 맞추어 설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좋은 이론도 바로 빌려다가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상황에 가장 알맞게 국가의 개념을 설정하고 이론을 독자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곧 해당 국가의 국력의 핵심 부분으로 판단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연유에서 비롯된다. 칼 슈미트가 말했듯이 “어떤 한 나라는 외국의 법 특히 국제법의 어휘와 관념에 굴복할 때 비로소 정복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⁶⁴⁾

64) 이 구절은 그가 1933년에 행했던 강연 「근대 제국주의의 국제법적 형식(Völkerrechtliche Formen des Modernen Imperialismus)」에 나오는 구절이다. 인용문은 Schmitt, Carl(1988), *Positionen und Begriffe*, 2nd ed., Berlin: Duncker & Humblot, p. 179.

참고문헌

1. 1차 문헌

『三國史記』

『三國遺事』

『朝鮮王朝實錄』(<http://sillok.history.go.kr>)

『礪溪隨錄』

『經世遺表』

신채호, 1975, 『신채호전집』 전4권, 형성출판사.

유길준, 1971, 『西遊見聞(全)』, 『俞吉濬全集』 第1卷.

『張志淵全書』, 1979~1989,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루소(2004), 『장 자크 루소와 국제정치』, 김용구 편역, 도서출판 원.

헤겔(1989), 『법철학』, 임석진 역, 지식산업사.

Bodin, Jean, 1962, (1606), *The Six Books of a Commonweale*, Kenneth Douglas McRae (ed.),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Hegel, G. W. F.(1999), *Political Writings*, Laurence Dickey and H. B. Nisbet (ed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erder, Johann Gottlieb(1969), *J. G. Herder on Social and Political Culture*, F. M. Barnard (tr. an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obbes, Thomas, 1996, (1651), *Leviathan*, Richard Tuck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 2차 문헌

김도형, 1994, 『大韓帝國期の政治思想研究』, 지식산업사.

김영작, 2006, 『한말 내셔널리즘: 사상과 현실』, 백산서당.

김용구, 1997, 『세계관 충돌의 국제정치학』, 나남출판.

김효전, 1996, 『서양 헌법 이론의 초기 수용』, 철학과현실사.

김효전, 2000, 『근대 한국의 국가사상』, 철학과현실사.

신용하, 1984, 『신채호의 사회사상 연구』, 한길사.
전복희, 1996, 『사회진화론과 국가사상: 구한말을 중심으로』, 한울아카데미.
尾形勇(오가타 이사무), 1979, 『中國古代の‘家’と國家: 皇帝支配下の秩序構造』, 東京: 岩波書店.
石田雄(이시다 다케시), 2003, 『일본의 사회과학』, 한영혜 역, 도서출판 소화.

Brunner, Otto, Werner Conze and Reinhart Koselleck (eds.), *Geschichtliche Grundbegriffe*, vol. 7, “Staat and Souveränität” 항목.

Coulbourn, Rushton (ed.)(1956), *Feudalism in Histo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Hexter, John. H.(1973), *The Vision of Politics on the Eve of the Reformation*, New York: Basic Books.

Iggers, Georg(1983), *The German Conception of History: The National Tradition of Historical Thought from Herder to the Present* Middletown, Conn.: Wesleyan University Press.

Post, Gaines(1964), *Studies in Medieval Legal Thought: Public Law and the State, 1100~1322*,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Riedel, Manfred(1984), *Between Tradition and Revolution: The Hegelian Transformation of Political Philosophy*, tr. by Walter Wrigh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kinner, Quentin(1978), *The Foundations of Modern Political Thought*, 2 vo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kinner, Quentin(1989), “The State,” in Ball, Terence, James Farr and Russell L. Hanson (eds.), *Political Innovation and Conceptual Chan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Tuck, Richard(1993), *Philosophy and Government, 1572~165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Weinacht, Paul-Ludwig(1968), *Staat: Studien zur Bedeutungsgeschichte des Wortes von den Anfängen bis ins 19. Jahrhundert*, Berlin: Duncker & Humblot.

Abstract

The Tradition of ‘State’ Concept in Korean History, 1145~1910

Sangsoop Park(Depart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Seoul National University)

■ Key Word : Nation, Conceptual history, Modern state, Sovereignty, Yu Kil-Jun, Shin Chae-H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rvey the concept of ‘the state(*gukga*)’ in Korean history. While the Korean state, in its contemporary form, is undeniably Western, many of its traditional elements originated in China. This hybrid history requires a multi-tiered approach, which traces the concept of the state in Korean history. First, we shall survey the history of the western concept of the state. Next, we shall study the history of the concept of the state in China and Japan. Lastly, we shall research this concept in Korean history. The Korean concept of the state enjoyed a very high degree of stability for many centuries, due to the absence of external political or theoretical challenges. However, in the late-nineteenth and early-twentieth century, the threat of Japanese imperialism changed this drastically, and resulted in an eruption of many nationalistic arguments for Korean independence, and an accompanying change in the idea of the state. However, lack of theoretical resources in articulating these new ideas forced Koreans to borrow from foreign theories, while the loss of state sovereignty, in 1910, stifled the development of even this elementary

discourse. As a result, Koreans were deprived of the opportunity to develop indigenous theoretical reflections on the matter of the state and on politics, and became heavily dependent on foreign theories and ideas.